

"유럽, 분열 가속화하면...10년후 美·中 식민지로 전락할것"

세계정책콘퍼런스

브렉시트·G2전쟁에 세계 혼란
트럼프가 혼든 자유무역 질서
지속면 대공황으로 이어질수도

생존 위해 다자주의 연대 절실
한국·호주 등 중진국 협력해야
"G20 다시 키워야" 권고도

윤원섭 기자 입력 : 2019.10.22 17:14:39 수정 : 2019.10.23 14:45:44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12회 세계정책콘퍼런스 '중국의 부상 속 세계 정치·경제 전망'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브리엘 펠베르마이어 쾰데 교수,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살라헤딘 메주아르 전 모로코 외교금융산업부 장관, 아르케베 오쿠베이 에티오피아 선임 장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다나카 나오키 국제공공정책연구센터 이사장,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 [윤원섭 기자]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G2(미국·중국)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리더십 부재와 극도의 분열에 빠졌다. G2 이외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미·중 전쟁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가운데 분열·분리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미·중 간 일부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세력 균형이 제기됐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 요건은 바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연대다.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 포시즌스 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2회 세계정책콘퍼런스(WPC)' 개막식에서 아마두 공 쿨리발리 코트디부아르 총리는 협력의 부재를 현 글로벌 지배구조의 핵심 이슈로 꼽았다. 쿨리발리 총리는 "최근 국가 간 협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은 물론 특정 국가와 외국인을 배격하는 배타주의와 고립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 공조 필요성은 G2전쟁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까지 겹친 유럽에서 강하게 대두됐다. 유럽 내에서 분리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의 발로로 분석된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WPC 의장은 "유럽이 내부적으로 분열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며 유럽의 단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더 나아가 "만일 유럽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유럽 각국은 분례 10년 후 미국이나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중국·유럽에 이어 새로운 균형자로서 중진국(middle power)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손 놓고 있을 때, 호주·한국 등 중진국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진국이 연대하면 패권국 중심이 아닌 여러 국가가 공조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다자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 부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G20을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를 다루는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20이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지금은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축소됐다"며 "산적해 있는 글로벌 정치·경제·금융 현안을 다루는 플랫폼으로는 G20이 최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리더십 부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특히 철저한 자국 이익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카를 브라우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은 "세계 무역 질서에서 진짜 심각한 도전과제는 미국 내부에 있다"며 "미국은 다시 진정으로 위대해지도록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WTO를 무력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프리 프리든 하버드대 교수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티다 노로돔 파리 데카르트대 국제법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법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나 향후 패권국가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면서 중국 민주화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 측 연사 입장은 단호했다. 홍콩 행정수반을 역임한 령춘잉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홍콩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콩을 국가가 아닌 도시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의 민주화를 하더라도 파리가 프랑스의 규율을 따르듯, 홍콩 역시 중국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라케시(모로코) =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